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영업금지 풀고 사적모임 세분화

정부 초안 마련, 이달중 최종 확정...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 자율·책임 전제 다중이용시설 규제 완화...2단계 팬 8인 모임 허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개인 자율과 방역 책임 등을 전제로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이다. 개편안을 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고, 자율적 영업을 보장하는 측면 등은 적다"며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방역 전문가 등은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 조치"라며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고=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한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회복엔 부족 vs 전체적으로 완화 부작용 우려=사회, 의료,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개편안에 더 많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각 업종과 시설에 따른 세부적인 고민이 담기지 않았

다"며 "대형 프랜차이즈는 문을 열고 소상공인은 문을 닫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또 같듯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개편안에서 자율과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지만 자율적 측면이 반영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책임 부분에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 조치인 만큼 역제역 등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전 거리두기 체계와 비교하면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완화된 모습을 갖고 있기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역제역'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남수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세 주춤...여수·장성·함평서 산발적 감염

3차 대유행 4달째...전국 400명 안팎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전남에선 여수와 장성, 함평 등에서 산발적 감염 사태가 지속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기준 보령사 룰렛터 관련 4명 등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123명으로 늘었다. 이 중 4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는 앞서 지난 6일에도 4명이 추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6일 여수와 장성, 함평 등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여수지역 신규 확진자 3명은 사회복지시설 직원 대상 정기 전수검사서 양성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센터 직원(전남 875번째 환자)의 가족(전남 876-878번)이다. 장성지역 확진자(전남 879번)는 서울 도봉구 894번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함평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마트 직원(전남 862번)이 방문한 농민단체 사무실 관련 n차 감염으로, 전남 880-881번 등 2명이 추가됐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6명 늘어 누적 9만 247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418명)보다 2명 줄었으나



5일 광주 동구보건소에서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들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99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올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2월 11~14일) 직후 집단감

염 여파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1주일(3월 1~7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55명→344명→444명→424명→398명→418명→416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3번, 400명대가 4번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서 고양이 코로나 감염...사람에 전파 증거 없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이 2주간 자가 격리된다. 지역내 동물감염 첫 사례며, 전국에선 7번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물위생시험소(1차), 농림축산검역본부(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키우는 고양이는 14일간 자가 격리

되고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양성 반려동물의 격리기간 관리 수칙에 따라 기저질환이 없는 가족 중 1명이 전담 관리하며 분리된 공간에서 사육한다. 만지기, 끌어안기 등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격리장소 청소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비누와 물로 세척 후 소독한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수의사와 상담 후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이번 광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 세종, 진주 등에서 고양이 4마리, 개 3마리 등 7마리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고 현재까지 반려동물 감염 사례는 사람으로부터 전파된 경우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시스템 구축해야"

광전연, 인재정책 방향 제시

빛가람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인재 유출을 감소시키는 등 지역혁신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대학,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용희 책임연구원은 7일 '정책연구'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현황과 채용 관계자의 정책 인지도를 분석해 실질적인 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에 따르면 빛가람공동혁신도시의 지역인재의무채용 대상인원은 2018년 1698명 중 21.1%인 359명이 채용됐다. 2019년에는 지역인재의무채용 대상인원 1611명 중 396명

을 채용하며 24.6%의 채용비율을 달성했다.

박 위원은 광주전남의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과 공공기관 여건을 반영한 인력수급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과 공동 협력체계라는 기본 틀에서 과제를 발굴하는 체계다.

이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발굴 → 지역대학 입학 → 지역공공기관 채용 →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의 지역인재채용 확대 선순환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연계·협력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오픈캠퍼스-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연계 ▲공동 지역인재채용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광주전남 지역인재채용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전략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자료 720건 정밀 조사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히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올해 1월부터 720건(2천95명)의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처분 자료, 대출 자료 등을 받아 검토 중이다.

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실거래 의심 390건,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의심 318건, 공인중개사 증개 없는 직거래 의심 12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시는 실거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경기·수도권 20년 노하우

법적보장.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발전재단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발전소 번호	1	2
발전소명	보림(전)광명발전소	우리(전)광명발전소
소재지	노곡면	유남읍
용량(KVA)	99,645	99,645
위치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200, 204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200, 202
면적	938㎡	1,147.7㎡

2. 의견제출기간: 2021. 02. 25 ~ 2021. 03. 09.
3. 제출방법: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 및 E-mail 제출바랍니다.
- 우 편: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119길 10, 2층 (주)에코 광수정
- E-mail: uhb7988@naver.com

주식회사 에코 대표 정수정

공 고 문

여수시 평여동 560-3번지
위 땅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식재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나무는 임의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임차료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그에 대한 민원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TEL. 010-4904-2334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동 구
• 동 광 266-1920	• 남 광 673-6836
• 문 흥 266-1960	• 동 명 222-9054
• 북광주 525-3761	• 동 부 225-6001
• 신 안 222-8171	• 중 앙 222-9054
• 양 산 571-7658	• 충 장 222-8171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남 구
• 우 산 433-1503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